

고교학점제 도입과 지역-학교의 협력

이경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본 고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과 최근 고교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역과 학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최대한 고려하게 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음. 학년에 구별되지 않고 개별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이미 부분적으로 서울, 경기, 세종에서 이러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개별 학교의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과 학교의 협력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역과 학교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고교학점제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I. 고교학점제 도입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미

- 고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최대한 고려하게 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강화됨
 - 학년에 구별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소득 격차를 비롯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 심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수요의 증가, 사이버학습 콘텐츠의 무한한 증가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임

□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 학점제 논의의 시초는 교육부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임
 -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국어고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외교 대책의 일환으로 ‘영어·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안)’ 제시
 -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2010년 1월, 관련 정책의 로드맵 구상을 위해 ‘고교 교육 선진화 추진 TF’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진행은 지지부진함
 - 작년 12월,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학점제를 운영하고 점차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고교학점제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함
 -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고등학교 학점제 실시’, 안철수 후보 ‘학점이수 제도 시행’, 심상정 후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 도입’, 유승민 후보는 고교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약속함
 -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의미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유사개념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中>

▶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 발표 → 시범 운영 → 단계적 확산

- (단기) 학교 내 선택과정 확대
- (중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¹⁾, 일반고-특성화고 연계²⁾ 등 학교 간 학점 연계 추진
- 1) 기존의 공동교육과정의 학교 간 이동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2) 원하는 시기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경로 설계(진로 탐색 → 예비직업과정 → 심화과정)

□ 학점제의 정의

- 학점제란 ‘학생이 특정 교과목, 강좌,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했다는 조건이나 기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수업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대학을 예로 들면, 특정 과목이나 강좌를 제대로 이수했다는 조건으로 학점과 성취수준을 제시함

▶ 학점과 성취수준

- (학점) 학생이 2학점 과목이나 강좌를 이수했다는 것은 주당 2시간씩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을 수강했다는 의미
- (성취수준)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도달해야 하는 성취수준에서 최소 수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A, B, C, D, F의 5단계 성취수준 척도 적용

□ 학점제와 단위제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학점제는 대학 수준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점제 대신 단위제가 적용됨

▶ 단위제

- 단위제는 학점제에서의 ‘학점’에 해당되는 개념
-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의 시간량
-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204단위를 이수해야 함

- 단위제와 학점제는 ‘성취수준’ 기준의 유무와 ‘무학년제’와의 연계 방식의 유무에 차이가 있음

- 현 고교 단위제에는 성취수준 기준이 없음. 출석만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고교 단위제는 대학에서의 학점제와 달리 무학년제와 연계되지 않음. 현행 체제 하에서 다른 학년의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으며, 학년별로 설정해 놓은 교과목만을 택할 수밖에 없음

Ⅱ. 고교 교육의 새로운 흐름 : 교육과정 다양화

□ 최근의 고교 교육의 흐름

○ 교육과정 다양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전 정부의 정책이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는 학교 안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정책의 중심이 있음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흐름에도 기존의 결과중심의 양적평가가 아니라 투입요인 중심, 과정중심의 질 관리 평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現 고교 교육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인 현실

-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선택 기회가 거의 없고 선택과목 개설은 학년과 학급(계열) 단위로 획일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요 교과 위주로 교과목이 개설됨

○ 배움과 성장에 대한 질 관리가 부족하여 책임교육이 작동하지 않음

- 졸업요건은 성취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출석일수의 확보임
- 과정 위주의 질적인 평가보다 결과 위주의 양적 평가로 그칠 수밖에 없고, 성취수준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 또한 결여되고 있는 실정임

□ 고교 교육 문제의 원인

○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되어 있고, 상대평가 중심의 서열화 된 9등급 내신제도

- 현재 고교 단계에서 성취평가제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음
- 교육과정 운영이 교원의 상황과 행정이 위주로 편성됨. 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음

○ 상당한 분량의 교육과정

-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남

□ 고교 교육의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

○ 고교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함

-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적 문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

○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에 있음

- 이전의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에 대한 요구는 일부 소수에게만 특목고·자사고로 대표되는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됨. 그 사이 폭넓게 1:1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고교 다양화 정책의 부정적 요소가 돌출되고 일반고 슬럼화는 더욱 심각해짐
- 일부 시도교육청은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정 클러스터’ (경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세종) 등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사례>

<p><서울시교육청></p> <p>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과 탐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개방형) -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확대·발전(연합형) -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 기존의 거점학교형, 위탁교육형 외에도 단위학교를 넘어선 학교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한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을 제시
<p><경기도교육청></p> <p>교육과정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 내, 3개 이상의 진로집중과정 편성 유도 -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문형 강좌 개설 운영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정책 외에 인근의 2~4개 학교가 연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꾸준히 확대 -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내의 각 학교가 1~2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 수강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 인근학교 간 직업·예술·과학·국제 전문 계열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 동일 생활권 고교별 상호 특성화된 거점학교(학교별 서로 다른 2~3과목) 운영
-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인문·예술·과학 집중 3개 고등학교를 하나의 캠퍼스 안에 설립하여 캠퍼스형 고등학교 구축(2021년까지)



[세종시 캠퍼스형 고등학교 구상]

Ⅲ. 고교학점제 도입과 지역-학교의 협력 : 전북 완주 사례

□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교의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내실있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협력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

- 학교와 학교 간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하고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학점 교류 형태의 확장이 필요함
- 교양·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콘텐츠가 있는 학교 밖 기관을 학점제 기관으로 심의·지정하여 찾아오는 교육과정과 찾아가는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시설 제공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사람, 네트워크, 프로그램(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과 학교는 교육과정의 플랫폼, 지역사회는 진로교육의 무궁무진한 창고

○ 지역주민, 지역사회 단체가 진로 교사로 확장 가능

- 교육과정은 삶이고, 삶은 곧 지역에서 이루어짐
-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교육과정의 관점을 지닌다면 교육과정 재구성
성과 편제가 대단히 풍성해질 수 있음

○ 상호 신뢰를 지닌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을 모으고 만남과 소통의 장을 학교와
지자체에서 모색해야 함

- 교육과정을 학교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한두 번의 휘발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지역과 학교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함

○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중앙단위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
단위 교육과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학교 교사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과 학교의 연대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을 교육과정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정책의 성패
를 좌우할 것임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차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교육 조건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 : 학교와 지역의 적극적 협력 모델 필요

-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시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만들어내서 학교와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지역과 학교의 네트워크 구축은 지자체-교육청 협력 모델의 대표적 사례가 됨

▶ 지역과 학교의 대표적 협력 사례 : 전북 완주 ‘로컬에듀’

- 전북 완주에서는 2015년부터 ‘로컬에듀(Local-Edu : Localization Educat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로컬에듀는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학교 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 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혁신교육특구 사업,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협력을 요청함
- 올해는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국회의원, 군수,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장, 교사,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토크’ 원탁토론회를 진행함
- 이 행사의 슬로건은 ‘지역의 아이는 지역의 힘으로 키운다’로 지역의 주민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임
- 그 결과, 올해 완주에서는 전주 등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완주 지역 내 중·고교로 진학한 학생 비율이 4년 전에 비해 30% 증가함
- 전북 완주의 사례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역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됨
- 고교학점제 역시 이러한 노력 중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